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 19% 증액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작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주민 식생활 실태 조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 19% 증액

※ 본 자료는 10월 30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전년보다 4,024억 원 증액된(19.0%) 2조 5,255억 원 반영-」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20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은 전년보다 4,024억 원 (19.0%) 증액된 **2조 5,255억 원 수준**(농협자금 포함* 시 2조 9,892억 원)으로 편성

* 축사·원에 시설현대화,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금액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12.1.)을 통해 마련된 투융자 계획('08~'17년까지 총 24조 1,000억 원)에 따라 '12년까지 지원된 예산은 9조 1,040억 원(농협자금 포함, 누계)이며, '13년 예산을 포함할 경우 12조 932억 원(농협자금 포함, 누계)으로 전체 계획 대비 50.2%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짐.

- 20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은 **축산·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

※ 품목별 경쟁력 강화: ('12) 11,655억 원 → ('13) 13,397, 14.9% ↑

※ 근본적 체질 개선: ('12) 13,254억 원 → ('13) 15,515, 17.1% ↑

□ 주요 특징

- 첫째,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축사, 양식장, 원예시설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질병 관리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9% 증액된 9,164억 원 편성**

※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예산 기준): ('12) 4,171억 원 → ('13) 5,379, 29.0% ↑

※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실지원 기준): ('12) 7,002억 원 → ('13) 9,164, 30.9% ↑

- 특히, 수출 수요가 높은 **원에 품목** 등에 대한 **시설 신축을 지원**하고, 2012년 현장 농어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던 **이차 보전(금리 1%) 사업**을 신규로 **원에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둘째, 최근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축산 관련 예산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축산 위생과 관련된 제도 변화 대응, 질병 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2) 693억 원 → ('13) 838, 20.9% ↑

-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2) 1,240억 원 → ('13) 1,540, 24.2% ↑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신규): ('13) 1,200억 원

○ 셋째, 한국 농어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예산 확대**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 증액**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12) 289억 원 → ('13) 519, 79.6% ↑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2) 40억 원 → ('13) 60, 50.0% ↑

- 글로벌 수출 종자 개발 및 민간 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12) 29억 원 → ('13) 61, 110.3% ↑

※ Golden Seed 프로젝트: ('12) 25억 원 → ('13) 270, 980.0% ↑

○ 넷째,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지원 사업 (153억 원)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 원)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

주요 농정 이슈_2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작

※ 본 자료는 10월 2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사육·도축정보 확인 가능한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작」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사업 개요

-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 금지**
-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하여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

구분	참여브랜드	참여농가 및 마리수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개소	16	427농가 (1,231천마리)	13	8	34

□ 관련법률 개정

- 본 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 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
- (제도이행 대상자)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
- (준수사항) 돼지 등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 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 (감독)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 사육단계: 모든 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 점검
 - 유통단계: 농장식별 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 점검
- (제재수단)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부과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10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0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중 98로 전월대비 1p 하락**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0	101	104	105	101	100	99	99	98
(전기 대비 지수차) ²⁾		2.5	0.2	3.2	1.2	△4.3	△0.8	△0.7	△0.6	△0.3
구 성 지수의 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5	△0.3	0.5	0.5	△0.4	△0.2	0.0	△0.2	0.0
	생활형편전망	0.7	0.0	0.6	0.4	△0.7	△0.4	△0.2	0.0	0.0
	가계수입전망	0.3	0.2	0.5	0.0	△1.1	0.0	△0.2	0.0	0.0
	소비지출전망	0.5	0.0	0.5	△0.2	△0.7	0.0	0.2	△0.4	△0.2
	현재경기판단	0.2	0.1	0.5	0.3	△0.5	△0.2	△0.3	△0.1	0.0
	향후경기전망	0.3	0.2	0.6	0.2	△0.9	0.0	△0.2	0.1	△0.1

-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 각각 86 및 92로 전월과 동일**
-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과 동일, 소비지출전망CSI는 1p 하락**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A)	10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6	84	87	90	88	87	87	86	86	(-)
생활형편전망CSI	94	94	97	99	95	93	92	92	92	(-)
가계수입전망CSI	96	97	99	99	95	95	94	94	94	(-)
소비지출전망CSI	108	108	110	109	106	106	107	105	104	(△1)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과 동일,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는 85로 전월대비 2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는 137로 전월대비 2p 하락, 금리수준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7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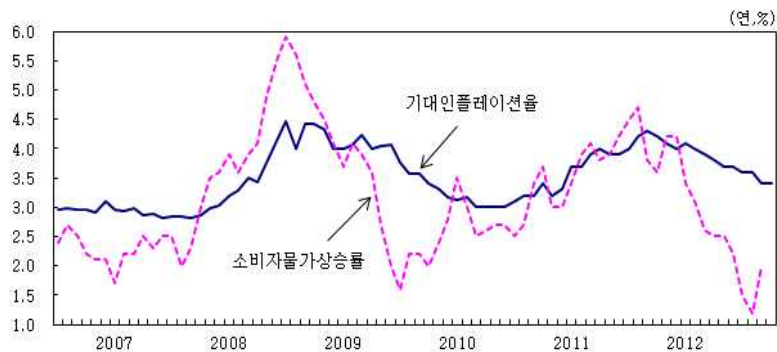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A)	10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8	70	77	81	74	71	67	66	66	(-)
향후경기전망CSI	80	82	90	93	81	81	78	79	78	(△1)
취업기회전망CSI	88	90	92	94	88	87	84	87	85	(△2)
물가수준전망CSI	142	141	137	137	137	136	141	139	137	(△2)
금리수준전망CSI	115	116	115	115	107	105	96	97	90	(△7)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4%로 전월과 동일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2.0~3.5%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이 57.5%로 전월대비 5.1p 증가한 반면 3.5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은 37.4%로 3.3p 감소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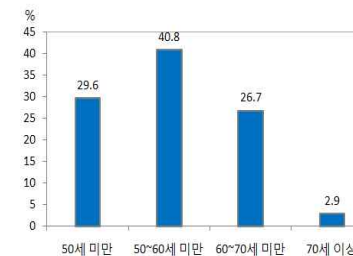
농촌주민 식생활 실태 조사

□ KREI 현장 여론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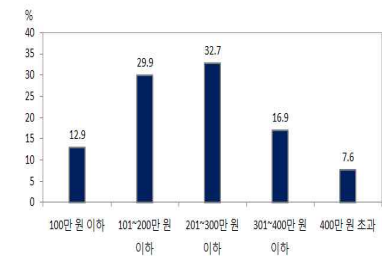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현지통신원과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
- 조사 기간: 2012. 10. 24 ~ 10. 30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자 현황: 총 290명 중 278명 응답(응답률 95.9%)

<연령별>



<월평균수입>



2. 조사 결과

○ 식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15.4%가 불만족

- 만족(매우 포함) 84.6% > 불만족 15.4%(매우 포함) 순
 - ※ 노인층일수록 만족도가 낮고, 월평균 소득과 만족도와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식생활 전반적인 불만족 요인: 균형 있는 영양섭취 부족

-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어려움 34.9% > 식재료 구입 비용 부담 32.6% > 식재료 구입 여건(거리 등) 나쁨 14.0% > 조리예 어려움 11.6% > 기타 7.0% 순

○ 식생활 습관: 30% 정도가 저녁식사 불규칙

- 규칙적이라는 응답: 아침 82.8% > 점심 74.3% > 저녁 70.4%
- ※ 농촌 주민들은 아침을 가장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을 가장 불규칙하게 먹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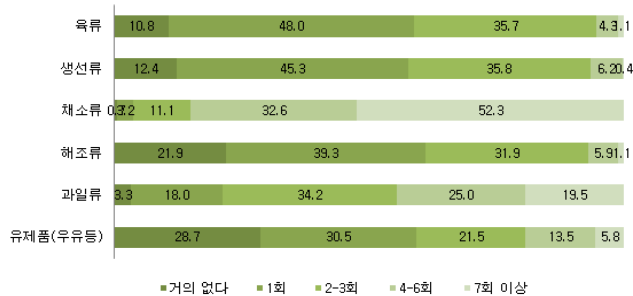
<하루 세끼 식생활 습관>



○ 식료품 섭취 주기: 육류, 생선류 섭취 미흡

- 응답자 50% 이상이 육류, 생선류, 해조류, 유제품 1주일에 1회 미만 섭취에 그침
- 채소류, 과일류 섭취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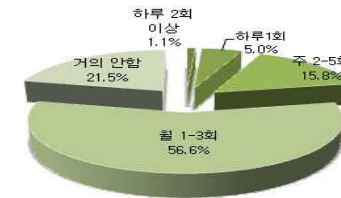
<식료품 섭취 실태(주간)>



○ 외식 실태: 10명 중 8명 정도가 월 1~3회 미만

- 월 1~3회 56.6%, 거의 안한다 21.5%로 대부분 외식 자주 안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외식을 상대적으로 자주하는 연령층은 5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외식 주기>



3. 농촌주민 식생활 관련 기타 의견 요지

- 필수영양소 섭취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권장표준 식단 제공 필요
- 자가 생산한 식재료 소비가 주를 이루어 도시 노인들에 비해 식생활이 부실함.
- 거의 채소위주로 식사를 하는 독거노인이 많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빈번하여 2~3가지 정도의 간단한 반찬거리로 식사하는 노인들이 많음.
- 가족(자녀 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은 정상적인 3번의 식사가 이루어짐. 혼자 지내는 노인들은 식사회수가 줄고 떡 등 간식거리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 농촌의 면단위에서는 육류나 생선류의 구매가 쉽지 않아 주로 채소류를 먹고 있음.
- 규칙적인 식사는 하고 있으나, 집에서 기르는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단백질이나 칼슘 등 섭취가 적은 편임.
- 균형 잡힌 식단이 어려움.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단위에 복지사(식재료 구입)가 지원을 했으면 함.
- 노인 1인 가구는 아주 간단한 식사로 때우는 경우가 많으며 농한기에는 노인회관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음.
- 농촌의 식생활은 주로 채식 위주이며, 남자들은 약주(막걸리, 소주)를 거의 1주일에 5회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KREI 리포터 연장의 소리

1. 농촌주민 식생활 실태 연장 여론

○ 농촌생활 특성상 과도한 노동과 불규칙한 식습관이 문제

- 우리 농업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됨. 하루 14시간 정도의 노동은 자연스레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 과도한 노동 후에 술로 간단한 요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인 식습관이 되었음. 제때 식사하기가 힘든 것도 식생활에 가장 큰 문제임.<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보니 어르신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많아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새참을 드시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부산 기장, 최시훈>
- 농촌의 식생활은 옛날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도시의 식생활과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봄. 농촌의 식생활 중 80%가 자가 생산한 식재료로 밥상을 차리고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종 열량의 원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이나 칼슘 등이 많이 부족함. 농촌은 아직도 경제적인 약자이기에 마음먹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는 어려운 현실임.<경남 김해, 김병철>

○ 농촌도 양보단 질의 식단으로

- 요즘 도시나 농촌이나 식생활 상태는 별 차이가 없음. 농어촌 주민들이 채소류나 신선한 생선을 먹고 각종 천연 조미료를 많이 쓰는 편임. 소, 돼지 등 육고기는 농촌에서는 적게 섭취하고 특히, 쌀밥은 당해 생산된 쌀로 밥을 하기 때문에 밥맛이 매우 좋음. 이제 농촌의 식생활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임.<경남 거제, 옥을석>
- 대부분 농촌 식단의 재료는 50% 이상은 자급자족하고 고기나 기타 재료는 시장에서 구입하여 먹기 때문에 도시에 비하여 식단을 꾸미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적게 듦. 예전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단백질이 적고 살이 적게 찌는 음식을 선호하며 기름진 식사를 피하려 하는 추세임. 이제는 농촌도 양 보다는 질을 많이 생각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외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충남 청양, 장석우>

- 농촌주민의 식생활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임. 산골마을에서도 냉장고는 물론, 김치냉장고도 60% 정도 보유하고 있음.<전남 화순, 나종주>

○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

- 농촌의 식생활은 신선한 채소를 먹을 기회가 많음.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고된 노동 후에는 한 두 가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아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충남 당진, 남도성>
- 농촌에서는 밑반찬으로 장아찌 종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염분섭취를 많이 하게 됨. 이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함. 앞으로는 우리 농촌 식단도 저염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강한 식사를 위한 식단 홍보도 강화해야함.<경남 통영, 이현순>

2. 기타 농촌지역 여론

○ 차기정부에 바라는 농업정책: 유통구조 혁신, 후계인력 육성

- 첫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생산 기반 정비 및 영농규모화가 필요함. 둘째,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계 농업경영인 예산·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업계 고교, 대학 졸업생의 정예화가 필요함. 셋째,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함.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등으로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함.<경북 영주, 김기원>

○ 차기정부에 바라는 농업정책: 농지 공개념제도, 자연생태환경보존 직불금제 도입

- 첫째, 농지 공개념 제도 도입이 필요함. 농업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농지의 투기자본 유입으로 농지 매매가격이 상승하여 규모를 갖춘 농업을 하기에 역부족한 상태임. 둘째, 자연생태환경보존 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논 생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됨. 다양한 철새 도래지라든지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내 영농활동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셋째, 고향세를 만들어야 함. 현재 주 5일은 도시에 기반을 두거나 반대로 농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임. 납부자지정 고향에 세금을 일정 비율을 책정하여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넷째, 생산계획 신고제를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통계를 구축해야 함.<전남 강진, 김은규>

○ 쌀, 과일의 수확 현황

- 쌀: 10a 당 320kg으로 예년에 비해 50% 감소되었으며 일반 벼도 400kg으로 30% 이상이 감소됨. 인근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 피해규모가 과소평가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정확한 수확현장 조사가 하루 빨리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됨.<전남 강진, 김은규>
- 올해 기장지역에는 과일이 흑성병이 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도 많아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함. 쌀농사도 수확량이 감소한 편임.<부산 기장, 최시훈>
- 태풍 '산바' 영향으로 영주, 봉화 등에 사과 피해가 있었으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배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25%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포도 캠벨어리 가격은 작년보다 20%이상 높았고, 잣은 비로 열과는 있었으나 당도는 양호하였음.<경북 영주, 김기원>
- 농촌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반해, 소득은 감소하다보니 쌀농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보완이 농업인들에게 최선책이라고 봄.<전남 순천, 김종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29일~11월 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후보 농정공약 살펴보다...

<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10대 대선공약 중 농정공약 >

-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각각 '10대 공약' 발표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농정공약 포함된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측은 제외

[문재인 대선후보]

○ (9번째 공약)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곡물자급률을 2030년까지 50% 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30% 높임.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등의 실현
△쌀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직불제를 강화해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단계적으로 확충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해 피해보전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농업인들의 유통기능 강화 △생협 등 직거래 유통 확대 등

○ (6번째 공약)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식품안전 약속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GMO 표시제 및 농수축산물 검역기준 강화 등

[안철수 대선후보]

○ (8번째 공약)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 식량자급능력 향상,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등을 공약의 목표로 제시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등을 통해

식량기반을 확충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을 늘리기 위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집중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 (3번째 공약)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를 활성화

[박근혜 대선후보]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이 10월 초 첫 번째 농정공약으로 농어업해대책의 개편방안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들의 기대와 달리 10대 공약에 농정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음.

[농민단체들 입장]

-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에 대해 **신선함이 없어** 부족
- 농어민들이 줄곧 주장해온 FTA 중단이나 농업예산 확보 등 **실제 현장에서 바라는 공약들이 없음.**
- 농정공약이 **구체성이 없는 ' 뜯구름 잡기'식**으로 실제 없는 공약이 아닌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1.1)

□ 내년 3,690억 원 투입, 축산농가 사료비 경감

○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10.27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총 **3,690억 원** 투입하기로. 이는 6월 중순부터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국내 사료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비중 50~70%를 차지하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배합사료 대체효과가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예산**을 올해보다 **24.2% 증액된 1,540억 원 편성**, ▲사료업체의 사료 원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사료구매 예산**을 올해보다 **58.3% 늘어난 950억 원 확대**, ▲축산농가의 50% 가량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하고 있는 방식을 **현금거래나 선금금 거래, 주문형(OEM) 사료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 축종을 대상으로 2,400여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평균 5,000만 원씩 **총 1200억 원 지원**. 이와 같은 사료 외상거래 방식의 전환을 통해 12~15%에 달하는 농가의 이자 부담이 줄어 사료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0.30)

□ 비료 원료 장부기계 · 보존 의무와

○ 농식품부, 10.29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이 **2013.4.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을 지난 10월 22일 개정 공포. 그동안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비료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등을 적발해도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리에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2.10.29)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된다

○ 농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 이번 조치로 농협 이외에 수협, 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다만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 개정안은 10.31일~11.19일까지 행정예고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1.2)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 미흡”

-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제주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기반조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주장을 제기. 정부의 당초 계획은 전북 익산에 150개의 식품기업과 10여개의 연구소를 유치해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을 선도할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공동집배송 시설 설립 연기**, **▲2008년 사업 시작 이후 2012년 현재까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실적은 국내 41건, 해외 14건 등 총 55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34.4%에 불과해 **민간투자도 지지부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체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로, 농식품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료 : 농민신문(2012.10.31)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 본 자료는 10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31천여 개의 모집단 조사구에서 추출된 22천여 개의 표본 조사구
- 조사 기간: 2012. 9. 20 ~ 10. 4(15일간)
- 조사 항목: 가을배추·무 등 전작물의 재배면적
- 조사 방법: 현지방문 후 실측 또는 목측 조사

□ 가을배추 재배면적

- **‘12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408ha로 ‘11년보다 3,918ha(-22.6%) 감소**
 - [원인1]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단위면적(10a)당 소득이 감소하면서 배추를 대신한 **타작물 재배로 면적 감소**
 - * 출하기 도매가격(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월,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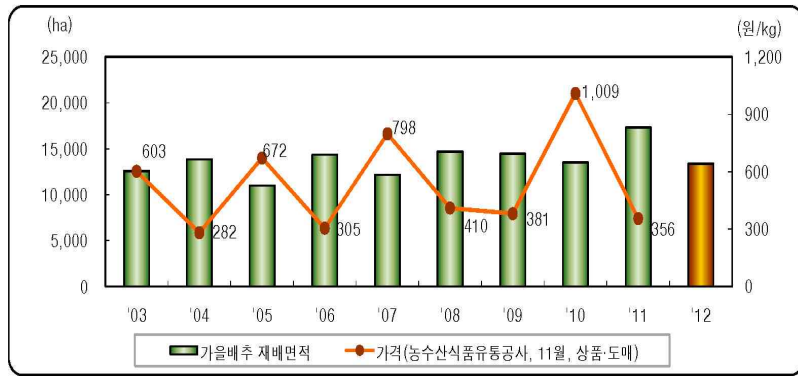
: (‘09) 381 → (‘10) 1,009 → (‘11) 356원/kg(-653원, -64.7%)
 - * 10a당 소득(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 (‘09) 1,023 → (‘10) 2,206 → (‘11) 1,089천 원(-1,117천원, -50.6%)
 - [원인2] **정식시기인 8월말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파종 시기를 놓쳤고, 토지의 침수 및 유실 등의 피해를 입어 재배면적 감소
 - * 정식기(8월 하순~9월 하순) 강우량(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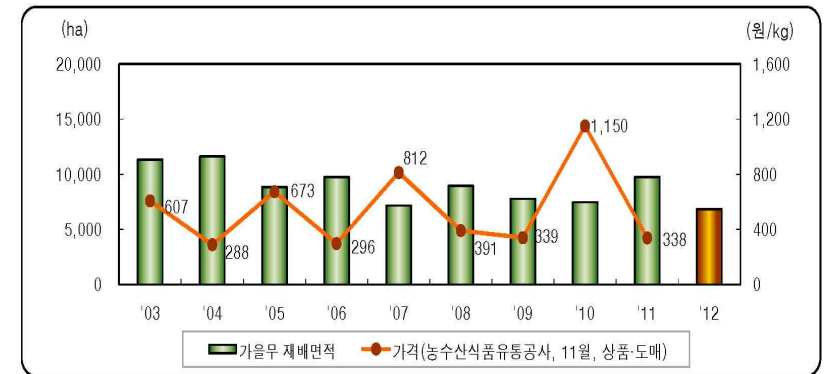
: (‘10) 364.6 → (‘11) 111.1 → (‘12) 514.2mm
 - * 지역별 정식시기

: 경기·강원(8.25~9.5), 충청(9.상순), 전북·경북(9.5~9.15), 전남·경남(9.하순)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가격동향>



<연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및 가격동향>



□ 가을무 재배면적

○ '12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826ha로 '11년보다 2,922ha(-30.0%) 감소

- [원인1]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단위면적(10a)당 소득이 감소하면서 무를 대신한 **타작물 재배로 면적 감소**

* 출하기 도매가격(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월, 상품)
: ('09) 339 → ('10) 1,150 → ('11) 338원/kg(-812원, -70.6%)

* 10a당 소득(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 ('09) 877 → ('10) 1,562 → ('11) 1,076천 원(-486천 원, -31.1%)

- [원인2] **파종기인 8월 중·하순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파종 시기를 놓쳤고, 토지의 침수 및 유실 등의 피해를 입어 재배면적 감소

* 파종기(8월 중순~8월 하순) 강우량(기상청)
: ('10) 297.7 → ('11) 110.5 → ('12) 401.3mm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